

국감 데뷔 광주·전남 초선들 정치역량 '시험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초선이 대부분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이 실질적인 세력 및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내공과 미래 비전을 증명받는 자리가 될 때이다.

특히,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시대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의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 줄 수 있는 청사진 제시도 요구되고 있다.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욕은 충만하다. 국감을 앞두고 각 의원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에서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회로 복귀,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보좌진들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관련 자료 검토에 밤을 새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실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처음 경험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욕과는 다르게 보좌진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서툰 모습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증인 신청 등을 놓고 무더진 칼날을 보이거나 정부 부처의 설득에 넘어가면서 벌써부터 여당 의원 습성에 길들여지고 있다

정치적 내공 증명 받을 기회
일부 추석연휴 반납 주경야독
의원별 의제 정하고 준비 분주
정치미래 결정하는 단초될 듯

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주요 국감 의제를 정해놓고 국감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당 위원장이자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그린 뉴딜을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이 그린 뉴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달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있어 보다 세밀한 지원을 주문할 예정이다.

행차의 이행석(북구 을) 의원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의 현실에 맞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위의 조오섭(북구 갑) 의원은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과 함께 광역의 미래 청사진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의 윤영덕(동남 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애인 등 교육약자를 배려하는 정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오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사범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4명이나 포진한 농해수위도 주목된다. 농해수위 간사인 서삼석(무안·신안·영암) 의원은 농도인 전담을 감안해 '식량 주권'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농어업 정책에 대한 조명과 함께 김치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김치산업진흥원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 결과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판에서 정치적 능력과 비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이번 국감을 통해 일정 부분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무적 능력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인연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입성한 경우가 많아 국감 결과가 시원치 않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그 의미는 크다"며 "세대·세대 교체가 이뤄진 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능력과 비전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가운데)과 윤영석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등이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박관현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민의힘 "당내 역사왜곡 특위 만들고 5·18언 망언 의원 제명"

5·18 3단체와 '광주 간담회'
'광주동행 국회의원' 등 참석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서진(西進) 전략'에 힘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아 자동 폐기됐던 '5·18 관련 3법' 처리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들의 약속 이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월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처리를 정치 수단이 아닌 진정성 있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5·18 3단체의 '광주 만남'은 5월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냈고, 지역민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주고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진행됐던 5월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광

주에 제2 지역구를 배정받은 '광주 동행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과 국민통합위원이 참석했다. 또 5월 단체에서는 5·18민주공화당주축회 김영훈 회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이중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문홍식 회장,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국민의힘의 광주 방문과 간담회가 "5·18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및 대선의 명석같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국민의힘이 (5·18 관련 3법 통과)에 실질적인 약속을 주어야 하며 5·18 동지들의 40년 염원이 응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광주에서 할 것도 제안하면서 5·18역사왜곡 처벌법,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공법단체 설립과 직계존비속 처리 관련 법안 등 5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되물었고, 국민의당 참석 의원들은 "답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5월 단체들은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5월 3단체장과 사전 조율을 마치고 간담회를 개최하

고, 정 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확답을 해 줄 것"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내보이겠다"면서 "당내에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의원은 스스로 "대책위 위원장을 맡겠다"면서 "5월 정신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은 제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당내 "지도부 및 대부분의 의원은 5월 정신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한 두 의원에 의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주 동행 국회의원 윤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일부 조항이나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큰 틀에서 5·18 3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동행 국회의원 8명은 5·18 3법 통과에 찬성하기 때문에 동행 의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위 선양" vs "형평성 위배"... BTS 병역특례 공정성 시비 조짐

노웅래 최고위원 재차 촉구

여당 청년 인사들 다른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6일 당내 청년 인사들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순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나"며 "발 디를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들) 탄파라로만 보나.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도 유독 대중문화 분야만 제외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최고위원은 "(내가 주장하는)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면서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인 BTS가 스스로 군에 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우리는 3차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991년생인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공정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의견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며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는 있지만,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

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앞서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 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병역 연기는 사실상 20대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와 권리 정도다. 면제나 대체 복무처럼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본인(BTS)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쉽게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1996년생 24세로, 역대 최연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